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2013년 9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2013년 8월 15일 ~ 2013년 9월 13일

주요 키워드

- 1. 복지부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설립 잠정 보류** :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설립 신청사례로 이목을 끌었던 제주도 '싼얼병원' 설립안이 잠정 보류됐다. SCI 그룹은 사업비 50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제주 혁신도시 인근에 지상 4층·지하 2층·48병상 규모의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을 설립·운영하는 계획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2. 보험업계 고객정보 수집범위 논란 확산** : 보험업계가 어디까지 계약자의 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 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과 개인 정보 보호가 우선이라는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3.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 50%로 결정 등 22차 건정심 진행** :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10월부터 적용되는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수가가 관행수가의 평균 50% 수준으로 결정됐다.
- 4.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첫 인센티브 대상 선정** : 고혈압 진료를 잘한 의원급 의료기관 4900여곳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 인센티브는 고혈압 환자가 1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적절한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 5. 기타** : 복지부 영양급여기준 대폭 정비, 의료취약지 학생 의과대학 특례입학 허용 논의, 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운영센터 본격 가동, 보건의료 노동자 주당 평균 46.9시간 노동, 서울대병원 경영효율성 극대화 및 적정진료 선언, 의료기기 리베이트 혐의 전문의 2명 구속, 미국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건강보험 혜택 비중 크게 늘어, 반포약 유효기간 위조·판매한 웨일즈제약 대표 검거, 의협 쌍벌제 소급처벌 중단 위한 '투쟁준비위' 가동

1. 보건의료정책

○ 의료기관 자격 지정·지정 취소 법률에서 규정 (8. 20)

김성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의료기관 등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문병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은 WHO에서 지정하는 황열, 콜레라와 같은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국립검역소 대부분이 국제공항과 항만에 위치, 접근성을 높이고자, 백신 접종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합한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은 검역소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을 위해 행정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자 하는 의료기관의 권리의무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지정신청이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또, 현행 의료법에서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취소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중대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이 그 기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 면허신고 안한 의료인 2800여명 행정처분 받는다 (8. 21)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일괄 신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이들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차 처분 대상은 의사 1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 등 약 2800여명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통지를 통해 미신고자들이 대거 신고토록 유도하는 한편,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 등 신고에 필요한 기간까지 처분 절차 진행을 유예해 현업 종사 의료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했다.

○ 의협-복지부, 의원 검진기관 평가 개선 합의 (8. 22)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해 별도의 행정인력 등이 없는 의원 검진기관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원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해 개선되는 사항은 서류제출 간소화, 개원가 대표 참여, 검사항목 기준 조정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3년도 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계획안'을 결정하면서 오는 30일까지 각 검진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평가정보시스템에 접속, 해당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질 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검진기관 평가 서류 작업이 방대한 분량이어서 별도의 행정인력이 없는 의원급 검진기관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서류 제출 마감기한이 한 달 더 연장된 것과 제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 합의돼 그나마 의원급 검진기관에 숨통이 트였다"고 반겼다. 또 검진평가 항목 개발시 개원가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필수항목이었던 화장실 및 탈의실의 남녀 구분이나 수검자 대기실 마련 등이 제외됐다.

○ 복지부,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설립 잠정 보류 (8. 22)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설립 신청사례로 이목을 끌었던 제주도 '싼얼병원' 설립안이 잠정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 사업계획은 국내 첫 사례이지만 이번 사업계획 승인이 향후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중국 의료법인인 (주)CSC(China Stem Cell Health Group)그룹의 요청을 받아 싼얼병원 설립계획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SCI 그룹은 사업비 50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제주 혁신도시 인근에 지상 4층·지하 2층·48병상 규모의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을 설립·운영하는 계획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한방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제도 일부 개선 (8. 27)

앞으로 한방전공의는 휴가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라도 부족한 수련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수련연도 변경 및 추가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오던 것을 사후 보고로 개선하며, 관련보고 업무는 한방병원 관련 단체에 위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따른 편의성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 50%로 결정 등 22차 건정심 진행 (8. 27)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10월부터 적용되는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수가가 관행수가의 평균 50% 수준으로 결정됐다. 항목은 심장초음파 등 43개 행위이며, 약 159만명의 중증질환자가 수술 전·후·모니터링 등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위험분담제도(리스크셰어링) 내년 1월 도입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하반기 추진일정 보고 ▲본인 부담상한제 소득수준별 3단계 → 7단계 세분화 ▲포괄수가제(DRG) 적용되는 자궁수술, 다빈치 로봇수술 시 비급여 인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단 연말까지 운영 등의 내용이 보고·의결됐다.

○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대폭 정비 (8. 31)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기준을 대폭 정비하고, 각종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보건복지부는 총 515개 항목을 검토해 이 중 494개 항목을 변경하고, 3개 항목을 삭제 등 497개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30일 고시했다. 개정안에는 ▲기재형식 통일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고시내용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도식화 ▲약제 일반원칙에 성분명 표기해 해당 약제 구체화 ▲약제 표기형식 통일 ▲상병명의 영문은 소문자로 표기(첫 글자만 대문자)하고 한글(영문) 병기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동일한 의학용어 반복 시 처음에만 한글(의학용어) 동시 표기 ▲제품명이 변경된 경우 반영, 제네릭 제품이 추가된 경우 '등' 삽입 ▲부연설명을 줄이고 간단 명료하게 기술 등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정됐다.

○ 의료취약지 학생 의과대학 특례입학 허용 논의 (9. 3)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급감하고 있는 공중보건직의사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전형단계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학생을 특례입학시켜 의대졸업과 수련 이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교육부도 지방 의대들의 경우 해당 의대가 소재한 도지역 학생의 최소 30% 정도를 해당 지역 학생에게 할당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진전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특례 입학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방 의대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지역 학생들에게 할당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대 특례입학 여부와 비율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예 공중보건직의사 양성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설립주체는 국가가 돼야 하며 입학한 학생의 학비와 경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신, 공중보건직의사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복안이다.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경우, 처방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환자에게 대체조제가 됐다는 사실을 의사가 인지하도록 저가약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가약을 복용한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 수련병원 전공의 파견근무 시 인력신고 방법 개선 (9.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파견근무 시 기타 형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력신고 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련병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모·자병원 중 한곳에서만 '상근'으로의 등록이 가능하게 했으나, 올해 7월 1일 진료 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면허정보를 기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파견근무 시 두 기관에서의 잦은 입·퇴사 신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다. 인력신고 방법은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련병원 전공의 파견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고, 파견 인력은 모병원에는 '상근'으로 신

고하고, 자병원 등 파견기관에는 '기타'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의 모병원은 전공의 입사 시 한 번만 '상근'으로 인력신고 후 퇴사 시 퇴사신고를 하면 되고, 자병원 등에서는 '기타' 인력으로 입사신고를 하면 된다.

○ 복지부, 전문병원제도 기준 강화 (9. 3)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시행되는 2기 전문병원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전문병원은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으로 지정 기준이 강화되고, 전문병원에 대한 특혜 및 홍보가 진행된다. 또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도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병원 규모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참고로 복지부는 지난 2011년 12월 대형 병원 쏠림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10개 질환 11개 진료과목별 전문병원 99개를 지정했다. 그 후 2년, 제도 도입의 의의는 좋았지만 이렇다 할 홍보나 지원이 없는 탓에 전문병원 지정제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더군다나 기존 지정 병원들은 전문병원 확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의료기관 인증을 전문병원 기준 조건에 포함시키는 사항은 예상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 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운영센터 본격 가동 (9. 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 건강정보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별 평생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정보를 공개·개방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운영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운영센터'는 '서비스개발팀', '데이터분석팀', 'ICT지원팀'으로 구성해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그 활용을 극대화하고, 향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유지·관리할 예정이다. 공단은 전국민 5000만명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자격 및 보험료 자료, 병의원 이용내역과 건강검진결과, 가입자의 희귀난치성 및 암 등록정보 등 10년 동안 축적된 1조3034억 건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과거 10년간의 가입자 자격 및 보험료, 진료내역, 건강검진 내역 등이 포함된 747억건의 '국민건강정보DB' 구축을 완료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국민건강정보DB를 대표하는 3종의 연구용 '표본DB' 구축을 완료하고 그 완성도 및 질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DB, 건강보험 징수, 급여, 건강검진 DB 및 연구용 DB를 추가적으로 구축해 학계, 전문기관 등에 공개·개방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바이오, 메디칼 디바이스, U-Health,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심평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첫 인센티브 대상 4900곳 선정 ... 의료 질평가 당뇨병으로 확대 (9. 13)

고혈압 진료를 잘한 의원급 의료기관 4900여곳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진료내역 평가결과, 총 4928곳에 총 5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인센티브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고혈압 진료결과가 좋은 동네의원 5059곳 중, 평가기간 동안 매월 고혈압 진료실적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한 곳이다. 심평원은 이들 기관에 평균 약 100만원의 인센티브(최소 10만원, 최대 320만원)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고혈압 환자가 1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적절한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평가에는 혈압약을 꾸준히 처방했는지를 평가하는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혈압약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권장되지 않는 병용투여율' '이노제 병용 투여율' 등 5개 지표가 사용됐다. 평가결과, 처방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처방일수율'과 '처방지속군 비율'은 전체 평균이 각각 89.6%, 83.1%로 2010년 이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약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지표인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은 전체 0.59%,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전체 2.24%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장지표인 '이노제 병용 투여율'도 88.81%로 높게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표별 일정수준 이하의 하위기관에게는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해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의료기관의 질평가를 추가로 진행해 고혈압 2회, 당뇨병 1회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

정이다.

2. 보건의료산업/기술

○ S-중앙병원, 의료관광활성화 위한 MOU 체결 (8. 18)

S-중앙병원은 지난 16일 제주중국성개발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의료상품 및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 고용증진을 위해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호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제주지역 의료발전에 앞장서게 된다.

○ 보건의료 노동자, 주당 평균 46.9시간 노동 (8. 20)

보건의료종사자들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이 9.3시간, 1주 근로시간이 46.9시간으로 나타났다. 주5일제가 도입됐지만 최근 10년 동안 주당 노동시간이 감소하지 않고 46시간 남짓에서 고착 내지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직종별로는 요양간병사(55.9시간)를 제외하면 간호사(48.2시간)와 조리배식(47.4시간)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0일 까지 조합원 4만2463명 중 절반이 넘는 2만2233명(52.3%)이 참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는 달리 보건의료노조 관계 사업장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병원 인력부족으로 인한 잔업이나 개별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잦은 병원 행사 및 운영과 교육 및 회의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병원노동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는 불만족(45점)으로 나타났다. 노동조건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노동자들은 해당 병원이 의료 공공성보다는 영리병원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원이 의료공공성에 비해 이윤추구가 강화되다 보니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의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이유로 현재 보건의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직을 고민하는 비율이 절반(53%)을 넘고 있으며, 이직을 고려하게 되는 주된 이유로 ▲일이 힘들거나(29.1%), ▲낮은 임금 수준(15.7%)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 삼성서울병원, 31일부터 토요일 진료 실시 (8. 21)

삼성서울병원은 오는 31일부터 고객들의 꾸준한 요구에 부응하고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전 진료과를 대상으로 토요일진료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요일진료는 내외과는 물론, 암병원, 심장혈관센터 등 병원 내 거의 모든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개설되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시간만 진행한다.

○ 서울대병원, 경영효율성 극대화 및 적정진료 선언 (8. 21)

서울대병원은 21일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 적정진료,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제도 개선 등을 위해 비상경영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오병희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교수직, 전공의,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사무기술직, 운영기능직 직종 대표가 비상경영실천을 위한 결의선서를 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환자감소 추세와 저수가 체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인해 의료계를 둘러싼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중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미래전략본부를 지난달 발족한데 이어 결의대회를 통해 향후 안정적인 병원운영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 의료기기 리베이트 혐의 전문의 2명 구속 (8. 26)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전문의와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관절수술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

은 혐의로 의사 안모씨(47)와 김모씨(41)를 구속하고 최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의사에게 의료기기 납품 청탁과 함께 4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이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의사 안씨 등 동해안지역 병원 전문의 7명에게 '자신의 업체에서 납품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해 달라'며 4억798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전문의들에게 수술 1건당 10만~70만원까지 금품을 제공하고 일부 전문의에게는 별도의 현금 봉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 진흥원, 중장기 보건산업 정책개발 연구용역 4개 과제 발주 (8. 2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이 '창조경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개발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0 HT강국 도약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육성 정부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신산업 발굴관련 2개 과제, 창업활성화관련 1개과제, 일자리창출관련 1개 과제를 선별해 정책기획연구를 발주했다. 보건산업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성장산업'이고, 지식집약적인 '융·복합산업'이며, 우수인력이 집중된 '미래주력산업'으로 정부에서는 지난 5월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보건산업 육성을 140대 국정과제로 포함해 집중 육성하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진흥원이 발주하는 4개 용역과제는 △의료-IT 융합 기반의 해양원격 의료시스템 개발운영방안 연구 △HT 융복합 신산업 발굴 및 추진 전략 수립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약, 의료기기 분야의 창업활성화방안 △주요국 보건산업 직업분석 및 유망직종 선정연구 등이다.

○ 일본, 의료사고 증가 ... 2005년 집계 후 최고치 (8. 30)

일본에서 의료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 소재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가 발표한 2012년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약 900개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의료사고는 28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다치로 2011년에 비해서도 83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주된 사고 내용은 복용량과 방법의 과실을 비롯해 몸 안에 거즈를 그대로 두거나 침대에서 이동시 떨어지는 사고 등이었다. 이런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216건(7.5%)에 달했으며 장애 등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329건(11.4%)이었다. 또한 의료사고와는 별도로 '니어미스(Near-miss/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생 건수는 약 69만 건으로 1병상당 3.08건이나 되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의료기관에서의 보고가 미진해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국산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시장 진출 가시화 (8. 3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식약처는 우리나라가 2017년 세계 7대 바이오의약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시밀러, 줄기세포치료제, 백신 자급 품목, 다국가임상 수행 국내 수탁전문업체(CRO) 및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업체(CMO) 등 5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2017년까지 ▲바이오시밀러를 4개 품목 ▲줄기세포치료제 6품목 ▲백신 자급 품목 20종 ▲다국가임상 수행 국내 수탁전문업체 3개소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업체 2개소로 육성한다는 것. 식약처는 2012년 현재 1개인 지원 품목을 2017년까지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세계 항체의약품 시장 점유율도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진출 지원 전략은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외 등록 규제정보 및 가이드라인 조사·분석 제공 ▲외국 규제기관의 상호협약 등이다.

○ 동국대 일산병원, 몽골 5개 병원과 MOU 체결 (9. 10)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지난 6일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소재한 5개 병원과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모름미셀병원장, 나모병원장 등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5개 병원의 병원장이 직접 본원을 찾아 의료관광 교류확대, 환자 진료에 관한 상호의뢰,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미국,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건강보험 혜택 비중 크게 늘어 (9. 12)

민주당의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미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연구진은 '여성건강문제'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2008~2010년 각 주의 메디케이드 출산 등의 데이터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2010년 출생자의 48%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에 따라 비중은 다르지만 이는 2008년보다 최대 19%나 늘어난 것이다. 메디케이드는 임산부나 어린이 및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국민의료보험제도로, 미국의 일부 주는 내년부터 보험에 들지 않은 저소득 여성 수천명에게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메디케이드는 1965년 사회보장법안이 제정된 이후, 1982년 애리조나를 마지막으로 미국의 모든 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층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인 메디케어와 함께 미국 사회복지제도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처럼 의무 가입이 실시되면 약 4400만명 정도가 추가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보험은 유학생이나 소액 투자자 등 비이민비자 체류자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어서 현지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보험업계 고객정보 수집범위 논란 확산 (9. 12)

보험업계가 어디까지 계약자의 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 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과 개인 정보 보호가 우선이라는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전·현직 임원 7명에게 최근 주의 등 경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지난 1~3월 두 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대한 검사 결과 두 협회가 수년 동안 금융당국이 허용하지 않은 질병 정보, 사망 원인 등 180여개의 고객 정보를 집적해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02년 재정경제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생보 및 손보 협회는 계약자 이름,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보험금 지급 사유 중 사망·상해 등 25가지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더해 수집 가능한 항목을 25개에서 60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쟁점은 질병 정보의 포함 여부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질병 정보가 승인된다면 요실금, 비뇨기계 질환과 같이 보험 소비자에게 민감한 질병 정보의 집적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영리단체로, 보험 정보가 유통된다 보면 유출 우려도 커져 결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 들어서만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에서 개인 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현재 고객의 보험 정보는 보험개발원, 생보협회, 손보협회가 나눠 갖고 있다. 지난해 보험 사기 혐의로 8만여명이 적발됐으며 그 규모는 4500여억원이다. 이런 불법을 막기 위해 보험정보관리원을 세워 보험 정보 수집을 일원화한다는 금융위의 안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시민단체는 협회의 정보 수집 허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 제약업계

○ 혁신형 제약협, 9월 중 사업계획 확정 등 본격 가동 (8. 23)

혁신형 제약기업협의회는 23일 제 1차 회장단 회의를 열고 위원회 명칭 및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특히 향후 운영을 한층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회원사 사장단이 직접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 후속절차에도 착수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실무활동을 맡을 3개 위원회 명칭을 '혁신형 R&D위원회', '혁신정책개발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로 확정했다. 각 위원회별로 14개 안팎의 참여 회원사는 8월말까지 향후 활동계획과 함께 확정키로 했다. 또 9월 중 위원회별로 1년간의 사업계획과 예산 규모 등을 정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회칙과 함께 의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일본, 혈압약 '디오반' 사태 계기 임상연구조작 '발본색원' (8. 30)

일본 후생노동성이 전국 병·의원에 임상연구 분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했다. 타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성 장관은 최근 전국 100여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부정 의혹이 있는 임상연구가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했다. 자체 점검 대상은 현재의 윤리지침이 시행된 2009년 4월 이후의 임상연구이며 9월 17일까지 신고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노바티스파마의 고혈압 치료제 임상연구 데이터 조작 문제가 기화가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정밀한 점검을 통해 문제 소지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방침이다. 노바티스 일본법인이 판매하고 있는 고혈압 치료제 '디오반'의 효과를 연구한 교토부립의과대학 마쓰바라 히로아키 교수가 임상연구 논문에서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지난 8월 초순이었다. 노바티스 일본법인은 교토부립의대 측에 1억 엔의 기부금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후생노동성은 데이터 조작 문제에 대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등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조작문제에 대해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 국내 제약사 수익성 상승, 영업이익 46% 증가 (8. 30)

지난해 일괄약가인하로 실적 악화를 겪은 국내 상장제약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처럼 회복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긍정적 기대가 나오고 있다. 12월 결산 국내 상장제약사 45곳의 2013년 2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2조4085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261억원)대비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1861억원으로 전년 동기(1268억원)대비 46.7%, 순이익은 816억원으로 전년 동기(785억원)대비 4% 증가했다.

○ 반품약 유효기간 위조·판매한 웨일즈제약 대표 검거 (9. 10)

반품된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위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웨일즈제약의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판매가 되지 않아 반품된 의약품을 폐기처분 하지 않고 비밀 창고에서 제조번호, 유효기간을 연장해 라벨을 위조 최근 생산된 신제품처럼 판매한 혐의로, 한국웨일즈제약의 대표를 구속하고, 제조관리자인 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위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중이던 의약품 200여 품목, 약 250만정(5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웨일즈제약은 2013년 1월2일부터 8월8일까지 반품된 의약품을 폐기처분 하지 않고 새 포장용기에 옮겨 담아 재포장한 후 포장 라벨에 새로운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을 늘려 인쇄해 신제품인 것처럼 약국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4000여 개소에 4억4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2003년 4월부터 2013년 8월8일까지 10여년 동안 60억원 상당을 위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1월 29일 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을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판매하는 등 19개 품목 800만정 5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일본, 복제약 사용 비중 점점 증가 (9. 12)

일본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이 점차 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2012년도 조제 의약품 동향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제된 의약품 중 제네릭 수량 점유율은 28.7%에 이르렀다. 일본은 비싼 약제비로 인해 정부 재정이 늘어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일본은 기존 원내 처방분을 포함한 제네릭 의약품의 수량 점유율을 지난해 말까지 30% 선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 독려했지만 당초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다. 일본은 제네릭 의약품의 수량 점유율을 2017년도까지 60%로 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 불법 리베이트 처벌 구 약사법 '합헌' 결정 (9. 12)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를 처벌하는 구 약사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사들에게 역학조사 사례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 임원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관의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가까스로 합헌으로 결정났다. 이 사

건의 쟁점은 구 약사법 95조1항8호가 위헌인지 여부다.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복지부령에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었다.

○ 일본, 의약품 인터넷 판매 규제 화상전화 도입 (9. 13)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무분별한 판매를 막기 위해 화상전화를 도입하는 안을 내놨다. 후생노동성은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최근 열고 인터넷 판매사업자는 화상전화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안의 대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약품의 판매 및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응한 약사들의 성명, 상대방의 연락처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인터넷 판매자는 웹 사이트에서의 영업뿐 아니라 동일 실제 점포를 주 40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도 부과한다. 그러나 경매 형식의 인터넷 판매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겨도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금지하기로 했다.

4. 의업단체 동향

○ 간호법 제정 위한 '전국대장정' 막 올라 (8. 20)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10월 23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이 간호법 제정 지지 서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국 대장정을 실시한다. 이번 대장정을 통해 간협은 국민들 곁으로 찾아가는 간호봉사 활동을 펼치면서, 간호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지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협회 중앙봉사단과 전국 시도간호사회가 협력해 전국을 순회하며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 병협, 초음파 급여화 문제제기 (8. 22)

대한병원협회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 검사 급여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중증질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생존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각종 통계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주요 대학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음파검사 급여화는 또 다른 경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2011년 의료순이익률은 -0.6%로 현재 진료를 통해 수입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영상장비 수가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이용을 줄이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경기불황까지 더해져 의료수익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병협측의 설명이다.

○ 의협 노환규 회장, 의협 구조개편 필요성 제기 (8. 23)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현재 의사협회 산하단체로 돼 있는 각 개원의 단체들에 대해 의협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협이 오락가락하고, 회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구조적 문제 속에서 찾았다. 10만 의사의 대표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단체, 즉 개원의를 위한 이익단체 역할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의협이 권위에 기반하는 공익적인 목소리를 내고 ▲병원 대표단체(병원협회), 개원의 대표단체, 병원의사회, 전공의협의회 등의 단체들은 이익단체로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의원협회가 하나의 '개원의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렇게 되면 개원의 단체는 의협으로부터 일부 조직과 예산을 받아 역량 있는 조직으로 탄생할 것이고 개원의를 위한 이익단체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으며, 결국 대한병원협회와 대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 폭력 없는 진료환경 위해 '한목소리' (8. 23)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료단체는 23일 '환자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최근 발생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영상 시청으로 시작했다. 상영된 2건의 폭행 사건 영상은 일산 피부과 진료실에서의 살인미수 사건과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자로 의료인의 머리를 찍어내리는 영상이었다. 5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환경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실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는 만큼 의료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의협 노환규 회장,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처벌시 의사면허 반납 (8. 28)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8일 "정부는 리베이트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즉시 중지하라. 만약 지속한다면 저부터 의사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리베이트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수수한 4명의 의사들이 의사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동아제약 교육동영상 촬영에 응했던 의사회원들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고발돼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 받고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노 회장이 언급한 의사면허 반납 시기는 ▲리베이트쌍벌제 이전 4명의 의사들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항소심의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현재 동아제약 사건과 관련해 징역이 구형돼 있는데 의사면허 박탈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이 나온다면 그 즉시 ▲리베이트쌍벌제 이전 수수혐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등이다. 하지만 노 회장이 의사면허를 반납해도 현재 의사면허관리기관인 복지부가 수용을 하지 않으면 면허 반납은 어렵게 된다.

○ 의협·치협·한의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건의서' 공정위 제출 (8. 29)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공동으로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의료법 제35조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근거로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비의료인이 개설할 수 있는 예외적 형태의 병의원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라는 이념에 따라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허점이 있어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2월 공정위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8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의료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급여 허위청구, 불법 환자 유인, 무자격자 의한 의료행위 등의 탈법 운영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일부 의료생협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 제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도 부처협의를 통해 동일한 취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키로 한 바 있다. 공정위도 '2013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를 위한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령을 개정키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국회에 보고한 '2013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계획'에서 의료생협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금지, 개설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을 오는 8월말까지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 제 17대 대전협 회장에 장성인 후보 당선 (9. 6)

제 17대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장성인 후보가 당선되며 '전공의 특별법' 제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장성인 당선자는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개표 결과 84.2%의 지지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공의 1만94명 중 417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장성인 후보자는 3511표의 지지를 받았다.

○ **의협, '의사 인권탄압 중단 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9. 7)**

대한의사협회는 7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사 인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자 전국의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이는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결행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향후 동일한 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한의협, 침약의보 시범사업 불참 결정 (9. 9)**

한의계가 한조시약사와 한약사가 포함된 침약의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사원총회를 열고 침약의보 사업 참여 여부,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등 6가지 의안에 대해 전 회원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조시약사와 한약사가 포함된 침약의보 시범사업 반대에 찬성 11704명, 반대 678명, 기권 7명, 무효표 12명이 나와 94.4%로 가결됐다. 투표결과에 따라 한의협은 앞으로 침약의보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지난 7월 임총에서 결의된 침약의보 시범사업 TFT는 즉시 해산하게 된다.

○ **병협,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비교 추가 공개 내용 비판 (9. 11)**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비교 추가 공개와 관련해 병원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비교자료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심평원의 추가 공개 결과는 지난 1단계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 당시와 동일한 단순가격 비교 방식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 상급병실료 차액 비교에 있어 병원 간 지가 차이,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 상이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특정병원의 실명을 거론함과 동시에 병원 간 최소-최대 금액 차이가 6배인 것으로 단순가격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 해당 병원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 **의협, 쌍벌제 소급처벌 중단 위한 '투쟁준비위' 가동 (9. 11)**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 중단 및 도가니법 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투쟁준비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의협은 11일 제 7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의협은 투쟁준비위원회 조직 구성은 지난 7일 개최한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상임이사회에 따르면 후속 대책으로 ▲투쟁준비위원회 즉시 조직 ▲전국의 시도 의사사회는 시군구의 사회 통해 반모임 재조직해 구축 진행상황 보고 ▲협회는 반모임에서 학습할 자료를 만들어 1주일 단위로 시도 의사사회 통해 반장에게 공급 ▲의사인권탄압제도에 대한 서명운동 및 불분명한 리베이트쌍벌제에 근거한 처벌 탄원서 제출 운동 등을 제안했다.

5. 질병/기타

○ **올해 첫 해외유입 콜레라 내국인 환자 발생 (8. 21)**

질병관리본부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내국인 한 명이 콜레라 환자로 확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들어 처음으로 확인된 콜레라 해외유입 사례로, 최근 3년간 총 11명의 콜레라 환자가 해외유입으로 발생한 바 있다. 이 내국인은 지난 18일 텔리(편명: AI310)를 출발, 당일 국내 입국시 검역조사 과정에서 검체 검사를 통해 발견됐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는 환자의 검체를 통해 비브리오 콜레라 오가와형(V. cholerae O1, Ogawa,)으로 최종 확진했다. 검역소에서는 콜레라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해 동승했던 일행(2명) 명단을 관할 보건소로 통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항공사(인도

국적) 측에는 기내 소독을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 대전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1년차 투신 '충격' (9. 7)

대전 모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던 전공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대전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1년차인 박모(28)씨가 아파트 현관 난간 위에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이 신고됐다. CCTV 확인 결과, 숨진 박모씨가 엘리베이터로 14층에서 내린 장면이 확인됐고 최근 업무량이 많으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유족의 증언 등을 토대로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정확한 사인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는 이렇다 할 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공의특별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